

지만원 5·18 조사위원 추천설...한국당 제정신인가?

5·18진상조사위 출범시한 한달 넘도록 구성 안돼 공분

정부 합동조사단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17건의 성폭행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진상을 규명해야 할 5·18 진상조사위는 출범 시한을 한 달 이상 넘기고도 아직까지 구성도 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진상조사위가 아직까지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똥녀' 때문이다.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진상조사위 출범 자체를 무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내부적으로 위원 추천에 이견이 있어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광주를 찾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부 언론이) 고의적으로 늦추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야당 입장, 소수 정당 입장에서 위원을 추천하고, 또 당내 이견이 있다 보니 조율하는 과정이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위원 추천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손해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지만원씨 추천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지만원씨 진상조사위원 추천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지만원씨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북한군 개입설 등 왜곡 주범 민주당도 지역인사 중심 추천 '동네 위원회' 전략 비판 목소리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부인은 공감대를 그리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진상조사위원 추천에 대해서도 썩 평이 좋지 않다. 당내 역학관계에 의해 상임위원 및 위원 추천이 이뤄져 왔고 모두 광주·전남지역 인사들이 추천됐다는 점에서 '동네 위원회'가 됐다는 눈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문화상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도 지역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조사위원 구조상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판지를 막고 정확한 진상조사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장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5·18 진상조사위가 참혹했던 80년 5월의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31일 이뤄질 정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가 5·18 진상조사위 출범의 계기가 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 합동 조사단이 계엄군 등에 의한 집단 성폭행 사례를 발표할 경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한국당에 상당한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위원 추천을 서두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그 누구도 조사위원 추천을 적극 주장하지 않고 있어 진상조사위 출범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당에 상당한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위원 추천을 서두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그 누구도 조사위원 추천을 적극 주장하지 않고 있어 진상조사위 출범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의 진상조사위원 추천이 미뤄지는 것은 그만큼 5·18 진상 규명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이런 식으로는 자유한국당이 혁신과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대통령 내달 1일 국회예산안 시정연설

수석·보좌관 회의 주제 "보육시설 회계 투명하게 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올해 잇따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 협조를 구하고, 이에 수반하는 정부 예산을 국회가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한 민생·개혁 입법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현 정부 국정운영의 양대 축인 한반도 평화와 경제 활성화에 대한 여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대독보다는 대통령의 여의도 방문이 야권 설득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이어 내달 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국정협의회 개최'에 적극 나서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는 분석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논란이 되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 "국민이 아이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며 "재정이 지워지는 모든 보육·교육 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시급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하면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과 충분히 소통해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심사·채용, 별도 기구 필요하다

개별 기관에 맡겨선 비리 못 끊어 전남도 '무기계약직 공표제' 눈길 시·도 공동채용·배치도 방안

광주시가 분청과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 특별 등의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 특별감사를 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 및 채용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별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게 이를 맡겨놓을 경우 일부 고위직이나 담당부서장들에 의해 심사 및 채용 절차가 좌우되면서 공정함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도 채용 절차를 광주시·전남도 등 관리감독기관이 맡아 진행하는 방안도 고

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9일 광주시 분청과 산하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비리와 고용세습에 대한 자체 감사를 위해 회계감사팀을 주축으로 감사 범위와 방식, 기간 등에 대한 감사 설계작업에 착수했다. 광주시의 경우 민선 6기 공공부문에서 일제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바 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016년 '무기계약직 공표제'를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도내 22개 시·군의 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이 불투명해 사실상 '현대판 읍서제'라는 지적이 나오자(광주일보 2015년 6월 2일~8월 18일 보도) 전국 최초로 '무기계약직 공표제'를 도입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와 각 시·군의 무기계약직 운영 인원을 공개함으로써 불투명한 인력 채용 및 운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전남도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2월 1일부터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올해 무기계약직 운용인원을 전남도 홈페이지에 공표해 총 인원 범위 내에서 공표하고 투명한 인력 채용 및 운영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표인원은 전남도, 시·군 무기계약근로자 4742명으로, 이 가운데 전남도가 200명, 시·군이 4542명이었다. 2016년 증원 수요 예측인원은 34명, 시·군은 208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부터는 매년 1월 연간 인원을 확정해 공개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무기계약직 운영상의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되고 그 폐단이 사회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채용 규모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군이 아무런 기준이나 통제 없이 무기계약직 등을 선발했다는 것이다. 공무원 채용 경쟁률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각 시·군이 정해진

규정도 없이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남발하고 이들이 2~3년이 지난 뒤 정규직으로 신분 바뀌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민선 자치 이후 단체장 선거를 도운 인사나 친인척, 또는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을 공개채용이 아닌 추천에 의한 서류면접 등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계약직 공무원으로 뽑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들 계약직 공무원은 2년 근무 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어 채용 절차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인천공항공사, 가스공사 등에서 친인척 채용 의혹이 줄지어 터진 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산하 공사업 25곳에 대해 친인척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9주년

HNT 하나투어

하나팩

여행은 편안하게, 무안출발 해외여행

광주일보 고객 예약자 대상 혜택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 증정(대표자1명) ※출발후 제공/예약시광주일보 구독자임을 알려주세요

중국	대만/동남아	일본	
<p>상해</p> <p>299,000원~</p> <p>상해/항주/주각각 4일,5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p> <p>#상해야경#동양의 베니스 #주각각 뱃놀이</p>	<p>상해/장가계</p> <p>1,290,000원~</p> <p>상해/장가계/원가계 4일,5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p> <p>#천하제일명산 #일식미조여행</p>	<p>대만</p> <p>614,200원~</p> <p>대만/지우펀/야류 3일,4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월, 목, 금, 일요일 3박 4일 수요일 2박 3일</p> <p>#먹거리, 불거리가득</p>	<p>방콕</p> <p>664,900원~</p> <p>방콕/파타야 5일,6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수, 목요일 3박 5일 토요일 4박 6일</p> <p>#코끼리트레킹 #발미시지 #다이내믹 여행지</p>
<p>다낭</p> <p>899,000원~</p> <p>다낭/호이안/후에 4일,5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토요일 3박 4일 화요일 4박 5일</p> <p>#4성급호텔 #투분강투어 #후에전통가</p>	<p>기타쿠슈</p> <p>490,000원~</p> <p>기타쿠슈/유후인/벳부 4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3,000엔</p> <p>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매일출발 2박4일</p> <p>#지옥은천 #캐넌시티</p>	<p>오사카</p> <p>970,000원~</p> <p>오사카/교토/나라 4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없음</p> <p>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월, 목, 일요일 3박 4일</p> <p>#달천관광물경 #다양한 특식</p>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앱에서 확인하세요.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